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방안 - 중대산업재해 중심

A Linkage Plan betwee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Focused on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이 병 립* · 최 재 욱**

Lee, Byoung-Lim · Choi, Jae-Wook

요 약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Keywords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중대산업재해, 업무중단 리스크, 연속성, ESG

1. 서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01.27.)으로 인하여 그동안 현장 위주로 진행되어온 안전관리 활동과 책임의 중심이 최고관리자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동법 시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업인 처벌이 아닌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강화 및 안전투자 확대로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강영기 외, 2021).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안전을 확보하는 예방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및 그로 인한 추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김영국, 2021)는 주장도 있지만, 그동안 학계의 연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연계한 중대재해 예방과 동법 준수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중단성 사고에 대한 예방은 물론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있어 PDCA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동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2018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선행연구(이상신, 2022)를 참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해경감관리활동체계의 연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체계와 ISO 45001:2018의 조항별 요구사항을 비교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된 두 표준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유사하였다. 그리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적용범위가 재난과 업무중단성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중단 및 기업 경영상 재무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회적 현상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중대재해가 재해경감활동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서화 요구사항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문서화 요구사항과 연계하는 방안과 동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과 순서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연구내용

① 두 표준* 비교	② 산업재해 업무중단 리스크 확인	③ 동법 준수방안 제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요구사항 대부분 유사함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사업장 평균 40.5일 작업중지(고용노동부, 2022), '11~'18년 국내 상장 586개 제조기업 사고사망재해율 1% 증가시 영업이익의 18.7~26.4% 감소(박선영, 2019) 등	동 체계 구축 운영시 동법 문서화 요구사항 이행 및 의무 이행기록 체계적 관리 가능

* ISO 45001:2018과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 정회원 · 부경대학교 건축·소방공학부 박사과정 cie028@naver.com

** 평생회원 ·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교수 jwchoi@pknu.ac.kr

3. 결론

재난(업무중단 사고)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사전 및 사후관리 활동을 모두 지원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은 물론 각종 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재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 조직의 업무연속성 유지와 ESG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산업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이어야 하므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따른 각종 재난 및 안전 사고 관리체계가 예방중심의 체계로 더욱 진화될 수 있도록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기술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기, 이창대, 이성남 (2021)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법과기업연구 논문집, 11(2), pp.211~245.

김영국 (2021)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입법학연구 논문집, 18(1), pp.111~147.

우상선 (2022)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8(2), pp.333~342.

고용노동부 (2022.03.10.) “작업중지 해제 평균 40.5일 소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9723>), accessed (2022.08.27.).

박선영 (2019) 산업재해가 기업성장·수익성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2019-연구원-1545).